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7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 정책 분야의 광범위한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도민 직접 참여 보장 등을 위해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에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에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1조제9호 신설).

나. 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후환경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6060, 팩스 : 031-8008-3539, 전자메일 : 98jh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의 제언, 이행 등에 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이하 “기후도민총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도민총회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120명 이내의 도민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기후도민총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가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도민총회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후도민총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담당·팀장 직위·성명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용진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환경주사 전화수(8008-606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신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 1. ~ 8. (현행과 같음) 9. <u>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7조의2(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의 제안, 이행 등에 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u>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이하 “기후도민총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② <u>기후도민총회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120명 이내의 도민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기후도민총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u> ③ <u>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가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다.</u> ④ <u>기후도민총회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u>

	<p><u>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⑤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⑥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⑦ 기후도민총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발췌)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기도의 책무)

-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도는 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사업자의 책무)

- ① 도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녹색기술을 사용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도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경기도 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립된 중장기 감축목표는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 시장·군수,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행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하기 전

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대하여 국가위원회 및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투자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노동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4.5.16.>

2. 위촉직 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의원 2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5.1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4장 온실가스 감축시책

제18조(기후변화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탄소중립도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이행사항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익과 혜택을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에너지원별 잠재량을 파악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도가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 및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신·재생 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을 위하여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 지정 등)
-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전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전환 수행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산업·인력구조 등의 변화분석 및 실태조사
 2. 에너지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1.2.]
-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① 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 ①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를」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기이륜차 보급 등)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차”라 한다)의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 구입비용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3. 전기이륜차 핵심기술 연구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7.18.]

제26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순환경제 활성화)

① 도지사는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제26조의3(농축수산의 저탄소 구조 전환)

도지사는 농업, 축산, 수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축적·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 경기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리정책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생활에 미치는 영향
2. 기후위기 취약성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3.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 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민감도가 높고 적응역량이 취약한 계층 및 주거시설 거주자(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31조(지역 물관리)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된 경우에 탄

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

제3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 조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도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3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추진단(이하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도의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3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

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